

“한 톨이라도 더” 광주·전남 내년 국비 확보 총력전

시 ‘AI 인프라’·도 ‘SOC 사업’ 예산 반영 정부 등 요청
서울에 전진기지 꾸려 소통…첨단산업 예산 집중 공략

내년도 정부 예산에 대한 국회 예산심사가 본격화된 가운데 광주시와 전남도가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역 핵심사업의 성패가 올해 국회 심사에서 갈릴 수 있다는 판단 아래, 두 지자체는 서울에 전진기지를 꾸리고 예산 대응 전면전에 나섰다. ▶관련기사 8면

16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양 시도는 내년도 국비확보를 위한 전담팀을 구성하고, 핵심 관계자들을 만나 지역 미래 100년을 좌우할 핵심사업의 국비 반영을 강력히 요청했다.

광주시는 김영문 문화경제부시장을 중심으로 관계 부서를 서울사무소에 상주시켜 ‘상황실 체제’를 갖췄다. 예산안 확정 전까지 예산 담당 팀장과 실무진이 예결위 소속 의원, 기획재정부 관계자들을 잇달아 만나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반영을 요청하는 방식이다.

김 부시장은 “올해 반드시 확보해야 할 12개 주요 사업에 예산을 끌어오는 것이 목표”라며 “서울 현장에서 예산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시는 올해 확보한 3조6616억원의 국비와 별도로 △국가 NPU(신경망처리장치) 컴퓨팅센터 타당성 조사 20억원 △AI연구소 설립 10억원 △AI영재고 설립 48억원 △5·18 구묘역 민주공원 12억원

△옛 적십자병원 복원 17억원 △K-문화 콘텐츠 사업 2억원 △영산강 수질 정화 7억원 등 12개 현안 135억20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총력 대응을 예고했다.

특히 AI 예산은 ‘최우선 전략사업’으로 분류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인공지능 전환(AIX) 분야 예산을 더 크게 확보하기 위해 스마트 모빌리티 실증도시, 규제프리 실증 등 기존 사업과 연계한 설명이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국가AI컴퓨팅센터 유치 무산 이후 광주시는 AI 관련 예산 확보가 지역 전략산업의 연속성에 직결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전남도 역시 국회 인근에 별도 사무실을 마련해 ‘예산지원실’을 운영 중이다. 예산담당관실과 국고팀 직원 6명이 상주하고 있으며, 강위원 경제부지사는 일주일에 3~4차례 서울을 오가며 국회·대통령실을 잇달아 방문하고 있다.

강 부지사는 “예결위원에게 상임위원 관련 핵심 사업 한 건씩을 책임 있게 부탁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며 “매일 협조 메시지를 보내 설득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남도가 현재 집중하고 있는 예산은 △호남고속철도 2단계 731억원 △고흥~봉래 국도 15호선 4차로 확장 130억원 △국립 김산업진흥원 설립 10억원 △AI 첨



북게 물든 메타세콰이어 가을 길 휴일을 맞아 16일 오후 담양 메타세콰이어 가로수길을 찾은 나들이객들이 북게 물든 가로수길을 걸으며 가을의 정취를 즐기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단 축산업 융복합 밸리 5억원 △디지털 기반 자원순환 시범단지 구축 40억원 △전남 5·18기념관 및 커뮤니티센터 조성 5억원 등이다.

호남고속철도 2단계는 광주송정~나주~무안국제공항~목포를 잇는 78.3km 구간으로, 새 정부 국정과제이자 전남 서남권 편성성의 핵심 기반인 만큼 조기 추진 필요성이 강조된다. 김산업진흥원 설립

사업 또한 K-푸드 열풍 속에서 5조원 규모로 급성장한 김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국가 전담기관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다음 달 초 예산안 확정까지 서울에서의 상주 대응을 지속할 계획이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20일까지 나주 ‘인공태양’ 현장실사

21일 PT 평가…“인프라·R&D·부지 안전성 최적”

미래 에너지로 꼽히는 ‘인공 태양(핵융합) 연구시설’ 유치전이 3파전으로 압축된 가운데 정부가 이달까지 평가 절차를 마무리하고 1순위 지역을 확정한다. ▶관련기사 10면

16일 전남도와 나주시 등에 따르면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기반시설 구축 사업부지’ 유치계획서 접수 마감한 결과 나주, 군산, 광주 등 3개 지자체가 도전장을 냈다.

접수가 마감됨에 따라 과기정통부 등은 오는 20일까지 현장 실사를, 21일 지자체 3곳의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한 이달말 최종 후보지를 정한다.

평가는 총 100점 만점으로 △부지 면적·진입로·부대시설 등 기본요건 40점 △지진 안정성·임지 적합성 등 기술조건 50점 △지자체 지원체계 10점으로 구성돼 있다.

선정 지역에는 오는 2036년까지 1

조2000억원이 투입된다. 초전도 자석 등 핵융합 7대 핵심기술 개발과 실증 연구시설 구축이 이어지며, 연구 인력과 산업 생태계가 집적되는 국가급 거점이 조성된다.

2021년부터 이 사업을 준비해온 나주는 반드시 결실을 맺겠다는 각오다. 이를 위해 정주여건, 공동 연구공간 등 파격적 지원책을 제시했다. 특히 나주는 국내 유일의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를 중심으로 한국전력과 에너지 기업들이 집적해 있는 국내 최대 에너지 클러스터라는 점을 강력한 경쟁력으로 강조하고 있다.

또 핵융합 장치(토카막)의 필수 요소인 ‘초전도 도체 시험설비 구축사업’을 정부 지원으로 이미 추진 중이며, 광주과학기술원·전남대 등 지역 대학들도 연구 협력에 참여하기로 했다는 점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 관세·안보 협상 ‘조인트 팩트시트’ 최종 합의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 “한미 통상·안보 협상 최종 타결”

한미 팩트시트 발표…재계총수 회동, 후속 조치 논의

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최종 확정됐다. ▶관련기사 4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두 차례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합의한 내용이 담긴 설명자료 작성이 마무리됐다”며 “이로써 우리 경제와 안보의 최대 변수 중 하나였던 한미 무역·통상 협상 및 안보 협의가 최종적으로 타결됐다”고 직접 밝혔다.

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경주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 및 안보 관련 주요 쟁점에 합의한 지 16일 만이다. 이 대통령은 “내란과 국가지적·사회적 혼란으로 다른 나라보다 뒤늦게 관세 협상의 출발점에 섰지만, 한미 동맹의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존중과 이해에 기초해 호혜적 지혜를 발휘한 결과 한미 모두 상식과 이성애에 기초한 최선의 결과를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관세협상 결과와 관련해 “우리 경제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서, 또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에 한해 투자를 진행한다는 점을 양국이 확인함으로써 원금 회수가 어려운 사업에 투자를 빚지한 사실상 공여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를 확실히 불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국은 앞으로 조선과 원전 등 전통적 전략산업부터 인공지능, 반도체 등 미래 첨단 산업에 이르기까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협력적 파트너십을 구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면에 계속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건설·설치·인허가·리파워링·유지보수

빛이 수익이 되는 순간!
태양광 에너지로 만드는 지속가능한 내일!

(주)TH홀딩스

☎ 대표번호 : 062-940-8374 / 010-4572-7164